

보 도 자 료

보도	2024.12.19.(목) 10:30	배포	2024.12.18.(수)		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대부업감독팀	책임자	국 장	이행정	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박운규	(02-3145-8288)

금융감독원, 대부업·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☐ 금융감독원은 '24.12.19(목) 주요 대부업·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,
-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·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,
 - 서민·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,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
 - 또한,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및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에도 노력하여 대부업권 신뢰 제고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

대부업·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요

☒ 일 시 : '24. 12. 19.(목) 10:30 ~ 11:30

☒ 장 소 : 금융감독원 회의실

☒ 참석자 : (금감원)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,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 (대부업계) 21개 대부업·중개업자* CEO 및 대부금융협회 전무 등

* 리드코프, 바로크레디트대부, 넥스젠파이낸스대부, 에이원대부캐피탈, 미래크레디트대부, 산와대부, 안전대부, 골든캐피탈대부, 엘하비스트대부,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,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,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,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, 티플레인대부, 한빛자산관리대부, 베리타스자산대부, 웰릭스에프앤아이, 희망1자산대부관리, 엠씨아이대부, 대출나라대부중개, 대출세상대부중개

II 주요 당부 사항

1. 서민·취약계층의 권익보호 및 신용공급 확대 노력 촉구

- ❶ 최근 불안정한 정치·시장 상황 등에 편승하여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·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
 -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,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·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·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 개선 당부
 -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
- ❷ 서민·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「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*」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 당부

* 저신용자(신용평점 하위 10%)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
- ❸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,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 철저*

* 금감원은 '24.9.5~10.16.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 점검 후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였고 제도기간 내에 개선토록 유도 중

 - 특히,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
 -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,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(원리금 감면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)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

2.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

❶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생을 악의적·지속적으로 침해 중

- 더욱이,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,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 분위기 등을 틈타 불법사금융 범죄가 횡행할 우려가 크므로,
-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·중개 금지,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당부

❷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* 마련 필요

* 예: ①「여신거래 안심차단」서비스('24.8월 도입)를 통한 여신거래 차단정보 확인
②과잉대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부시 차주의 소득·부채신용 등을 철저히 확인(法 §7) 등

❸ 협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도·권고,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 법상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,

-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업계의 불건전 영업관행 등을 지속 개선토록 하고, 대부업 감독업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

○ 향후 위법·부당한 채권추심,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,

○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음

□ (향후 계획)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* 등을 지속 점검하여,

* 불법·부당 채권추심,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여부,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연계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

○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,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임

○ 또한, 금융위와 협의하여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* 등을 추진하겠음

*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총자산한도 상향 조정 등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III 업계 발언요지 및 향후 계획

□ (업계 발언요지)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대부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